

아르헨티나, 금융거래 전면 중단 조치 단행

(2002. 4. 22)

국별조사실

□ 금융거래 전면 중단 조치 단행

-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원의 예금인출 제한조치 위헌 판결 이후 예금인출이 쇠도하자 4월 22일(월)부터 금융거래 무기한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했으며, 의회에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함.
- 이번 조치는 예금인출 러시로 인한 현금부족으로 캐나다계 스코치아 은행이 중앙은행에 의해 30일간 영업 중지되는 등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.
-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예금인출 제한조치가 취해진 이후 예금주들의 개별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, 금년 들어서만 은행 예금의 11%가 감소하는 등 예금인출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기에금의 채권전환 등의 예금인출사태 해결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무기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□ 정기에금을 채권으로 전환할 듯

- 아르헨티나 정부는 예금인출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예금의 강제 채권전환을 추진하고 있음. 즉, 법원의 예금인출 허용 가치분조치로 인출되는 예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임.
-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기에금의 상환용으로 달러채권과 페소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, 달러채권은 10년, 페소채권은 5년 만기채로 원금과 이자는 분할 상환되며, 채권담보는 은행자본금이 될 예정임. 한편, 당좌 및 일반 예금의 채권 전환에 대비해 새로운 채권의 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.

-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총 350억 페소에 달하는 전체 예금 중 우선 정기예금 269.7억 페소를 채권으로 전환한 뒤 예금동결조치를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한편, 아르헨티나는 지난 1990년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. 당시 아르헨티나 메넴 정부는 경제안정프로그램인 'Bonex Plan'을 통해 1백만 아우스트랄(당시 아르헨티나 화폐단위)을 초과하는 모든 개인예금을 10년 만기 Bonex Bond로 교환하여 지급한 바 있음.

□ 향후 전망

- 금번 금융거래 전면 중단 조치로 아르헨티나 금융기관과 환전상들의 영업이 22일(월)부터 중지되었고, 아르헨티나 정부는 예금인출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, 예금의 채권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특히 예금의 강제 채권전환 방안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, 예금의 채권전환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던 1990년 사례가 있어 그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월급과 연금 지불이 동결된 근로자와 연금생활자, 실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, 1990년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정부 재정수입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예금의 채권전환이 성공하겠느냐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- 한편, 국제통화기금(IMF)과 G-7은 아르헨티나의 추가 금융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예금의 채권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문의처 김영석 ☎ 3779-6653 claudio@koreaexim.go.kr
 최성규 ☎ 3779-6665 ppio93@koreaexim.go.kr